

데스크시각



윤영기 사회부장

“촛불 집회 후에는 (탄핵이) 각각이면 혁명을 하겠습다. 태극기 집회에서는 인용되던 내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수 진영에서 계엄령도 요구하는 판국이잖아요. 극약 처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지요.”

최근 공개된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읽다가 그 첫머리에 등장하는 '현상 진단'을 토대로 떠올려 본 작성자들의 가상 대화다. 억울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계엄 문건'을 만든 군(軍)의 속내를 도대체 읽어 낼 길이 없다. 대명천지(大明天地)에 이런 문건을 만든 사람들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군이라니. '단지 검토 문서일 뿐'이라고 발뻠하지만 나라가 벌집을 쑤서 놓은 듯 시끄럽다. 당연한 일이다. 제주 4·3을 비롯해 4·19 학생의거, 5·16 쿠데타 등 무려 11차례 계엄 처하를 겪었기 때문이다. 불과 38년 전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는 비상 계엄령 전국 확대에 반발해 일어난 항거가 5·18민주화운동이다. 계엄군이 자행한 만행의 희생자들이 국립 5·18민주

계엄에 대한 음험한 향수

지에 누워 있는 영령들이다. 무덤에서 치를 떨 것이다. 계엄 문건의 생산지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다름 아닌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의 후신이다. 전두환은 보안사의 법적 활동 범위인 대공법정, 군 내부자 반란 조사 등을 벗어나 급단의 경계를 유린했다. 80년 보안사령관을 꺾치고 광주 5월 학살을 진두지휘, 권좌에 올랐다. 당시 2군사령관 진중채, 수경사령관 노태우, 20사단장 박준병 등 5월의 피를 물든 장본인들도 줄줄이 이 부대의 장을 거졌다.

군의 퇴행적 역사관

'보스' 전두환에게 충성했던 군인들은 권력을 보위하며 단맛을 탐닉했다. 이들이 떠난 뒤에도 보안사는 1988년 '511분 석판'을 꾸러 군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역사를 날조하는 등 5월의 피를 지우고자 했다. 보안사 소속 윤석양 이병이 1990년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자 보안사는 못매를 맞은 뒤 기무사로 명칭을 바꾸고 악명 높던 보안사 서빙고 건물도 헐리게 됐지만, 그 버릇은 여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MB 정부 댓글 부대 가동 의혹 등 민간을 침탈해 온 이들의 광성은 짙고고도 길다. 한마디로 역사의 퇴보다.

기무사의 퇴행적 사고와 음험한 향수는 13장짜리 계엄 문건(계엄사령부 편성표)에 짙게 묻어났다.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합동수사본부장(기무사령관), 계엄군사법원장(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등 주요 보직을 맡을 직책이 적시돼 있다. 검토 단계라면 이들 보직은 당연히 빈칸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계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이들 보직은 대통령,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임명할 수 있는 자리다. 이 자리를 임의로 채웠다는 것은 이미 정해 놓고 집권자가 갑박하게 계엄을 단행했던 선배들의 협잡을 떠올리게 한다.

기무사 입장에서 계엄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역사가 아니라 벤치마킹해야 할 전투 교범이었을 뿐이었다는 데 생각이 미친다. 5·16, 12·12가 그렇듯 잘만 하면 권력을 쥘 수 있다는 군의 탐욕을 자극했을 것이다. 계엄이라는 명석을 깔고 권력의 장단에 맞춰 갈증을 추면 영달을 누릴 수 있다는 가망치 않은 생각 말이다. '계엄 문건'은 대한민국 역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것을 말해 준다. 그렇지않고서야 어린이아이손 잡고 언 손을 호호 불어 가며 가냘픈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에게 '계엄'을 들이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문화 비평가 르네 지라르느 이런 의문에 어렴풋이 답을 준다. "욕구 불만의 폭

력은 항상 대체용 희생물을 찾으며, 결국 찾아낸다. 욕망을 유발한 대상이 정복·정취 불가능할 때 폭력은 그 대상을 폭력을 초래할 아무런 명분도 없는 다른 대상으로 대체한다."

집단지적 무사과의 위험

계엄의 봉인이 해제됐을 때 '군의 생태'를 가능할 수 없다는 점은 더 비판적이다. 80년 5월 광주에서는 3·7·11 공수부대를 포함한 줄잡아 3000여명의 군인이 '명령'에 따라 시민들을 학살하고 잔인하게 진압했다. '명령'으로 양심·가책·속죄까지도 삭제되거나 유보됐다. 당시 부대원 중에 발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무차별 진압을 거부하고 항명한 군인이 있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 광주 시민에게 총질을 했던 군인들은 단지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그 뒤에 숨어 '헬프 면죄부'를 받고 속죄까지도 면제됐다.

이런 범죄의 유대가 아직 군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비극이다. 아직 그 군대의 맹목적인 폭력성이 소멸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계엄 문건보다 이게 더 무섭다. 계엄 문건은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 역사가 진보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일깨운다.

/penfoot@kwangju.co.kr

社說

광주에 계엄군 투입 제2의 5·18 유발하려 했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옛 보안사령부)가 지난 2017년 촛불 정국 당시 광주·전남 지역에 또다시 11공수여단을 투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공수여단 부대원들은 지난 1980년 5월21일 시민군을 향해 일제히 M-16 소총을 발사,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숨지거나 다친 바 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담긴 '계엄임무 수행권 편성(안)'을 살펴보면 전라 지역에는 11공수여단, 26기계화사단이 편성돼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을 비롯한 전라·경기·강원·충청·경상 등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마다 공수여단과 기계화사단(기갑여단)을 동시에 투입한다.

이에 대해 5·18 연구자들은 38년 전 5월과 상황이 비슷하다면서 그때의 참상을 떠올리고 있다. 즉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가운데 정부는 광주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수여단으로 시위대의 기선을 꺾은 뒤 전방에 배치된 기계화사단의 탱크 등을 동원해 광주를 점령하려 했다는 것이다. 5월 단체들은 "지자부진한 5·18 진상

규명이 결국 또 다른 5·18을 불러 올 수도 있었다"며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역시 "5·18의 규명과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국민의 군대가 국민을 적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우리 또한 박근혜 대통령 기각으로 인한 소요 시 특전사와 장갑차를 동원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언론 통제와 정부 부처 장악까지 계획한 것은 사실상 '친위 쿠데타' 기도나 다름없다고 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문건 작성 과정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얼마나 관련이 됐는지, 어떤 문건이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으며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 책임자와 관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권의 첨병 역할을 해 온 기무사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총구를 국민에 겨누는 기무사는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기무사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 자동차 산업 초도화 미 관세 폭탄 막아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광주의 자동차 산업이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1200여 개 자동차 부품 기업과 연관 업계가 줄도산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소울과 스포티지 등 광주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50.1%, 차 부품은 11.8%가 미국으로 수출된다. 이처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차량 가격 상승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판매 부진과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이로 인해 300여 개 부품 기업과 900여 개 전·후방 연관 기업의 도산 도미노와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자동차 감산량이

20%일 때 도산 기업은 240개, 일자리는 1만3000개가 줄어들고, 50%일 때는 기업 600개, 일자리는 3만2000개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 지역 제조업 매출의 45%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면 산업 공동화는 물론 지역 경제의 쇠락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 전쟁에 지자체가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를 주축으로 민간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국유 관세 부과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출 시장 다변화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조기 완성으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저비용 고효율'로 재편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하겠다.

은펜칼럼



박홍근 건축사·포유건축 대표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가 다시 인간을 만든다. 도시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한다. 위치를 정하고, 활동 지역과 생활 공간을 분할하고, 입체적 모습과 삶의 현상을 조직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권력을 가진 조직, 그곳에서 일하는 인간의 자리에 의해 만들어 진다.

도시는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나온다. 정치 권력의 자리, 행정 권력의 자리, 자본 권력의 자리에서 나온다.

첫째, 중앙 권력이다. 중앙 권력은 도시의 위치와 장소를 정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혁신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 권력에 의해 만들어졌다. 공공기관의 탈수도권화를 주도한 혁신도시 건설은 많은 고소득 월급 생활자들의 삶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생활 지형의 일부를 바꾸었고,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 하고 있다.

둘째, 자치단체 권력이다. 지자체는 택지를 개발하여 도시 영역, 활동 영역

도시는 권력인가? 시장(市場)인가?

을 확장시켰다. 택지 지구가 조성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상업 시설이 만들어 졌다. 학교와 공원이 생기고 관공서도 이전했다. 반면 옛 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도시의 확산으로 교통 문제와 또 다른 공동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그나마 도시 팽창 시기에 가능한 일이 되었다.

셋째, 자본 권력이다. 중앙 권력과 자치 권력이 만든 필지들을 부동산 자본 권력이 사들인다. 그들은 최대 투자 수익을 위해 주어진 조건 내에서 머리를 짜낸다. 도시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생활 환경이 형성된다. 삶이 우선이 아닌 수익을 우선의 공간 조직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공간의 부족한 점들은 그곳을 이용하는 권력은 없으나 창의적이고 적응력이 강한 시민들에 의해 채워지고 가꾸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큰 도시, 새로운 도시는 중앙 권력이 만들고, 도시의 확장과 조직은 자치 권력이 만들었다. 도시의 모습과 생활 공간은 행정 권력과 자본 권력이 만들고, 부분적인 모습은 그들의 지향점과 맥을 같이하는 시민 권력과 개인 자본이 모여 만들어졌다. 특색 없는 도시들이다.

최대 발명품인 도시는 지금까지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자금 권력이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할 시점이다. 도시 확장은 한계에 왔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도시가 정체를 넘어 축소와 시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절벽의 시대엔 도시는 성장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우선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도시와 이를 이루는 건축에 대한 생각이 팽창, 투기, 몰광에서 내실과 문화와 가치로 달라져야 한다. 이익만 추구하는 것에서 이익과 가치 추구가 공존해야 한다. 인간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자리 권력이든, 자본 권력이든 생각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에 따라서 방향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권력을 가진 자의 생각이 가장 중요 이하다. 인간은 보고 싶어 하는 것에 시선이 멈추고, 듣고 싶어 하는 소리에 반응하고, 하고 싶은 말에 몰두하게 된다. 이것을 지배하는 높고 탁월한 생각이 필요하다.

다음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市場, market)이다. 규제는 간섭이 아니라, 방향만 잡는 최소한의 장치여야 한다. 멋지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것에는 더 잘하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유연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사람이 바뀌고 이해 관

계가 상충될 때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이 시스템은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자율을 보장하고 조율할 시스템이어야 한다. 창의적이고 원활한 흐름이 보장되는 시장이 형성될 정도면 좋다. 여러 방면의 탁월한 생각과 시선을 가진 자본이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기회와 도움을 줘야 한다. 행정은 지원을 하고 간섭은 최소로 하면서 더 잘하도록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은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치나 행정 주도적인 것보다 창의적 시장에 맡겨진 자본 권력은 본인들의 생존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준비할 것이다. 더 높은 사유와 판단을 할 것이다. 지금은 도시를 만드는 자본 권력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자율을 끌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만 필요한 것이다.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좋은 시장이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살기 좋고, 가보고 싶은 도시가 만들어 지도록 해야 할 때다.

지속 가능한 실천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을 지원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순환이 되게 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을 살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공생명(公生命), 염생위(廉生威)

증가하면서 지방 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 저성장, 산업 쇠퇴 등 다른 도시와 비슷한 여건이지만, 해방 이후 산업화 시대의 장기간 소외로 인해 지역의 부가 쌓이지 못하고 시가지 시설 역시 열악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면에서 민선 7기가 출범해 향후 전개될 광주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민선 7기가 내건 시정 철학인 '혁신, 소통, 청렴'이 지금 공직자가 갖춰야 할 소양임을 공감한다. 혁신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통해 관습,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난 1월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혁신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리 하지는 혁신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혁신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고 말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광주 공직자의 혁신은 시민을 향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그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 서로 잘 통해서 오해가 없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은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는 생각이다. 행정에 있어서 바람직한 소통은 상대방, 즉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려는 경청의 자세와 건전한 토론 문화 정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혁신과 소통은 융합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 이념이며, 특히 창의성을 중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좌우명이기도 하다.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청렴과 공정일 것이다. 혁신과 소통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중국 명나라 관운례(郭允禮)가 어느 마을의 원님이 되어 비석에 좌우명을 새겼는데, 그 내용은 "아전은 나의 위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청렴을 두려

워한다. 백성은 나의 능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정에 복종한다. 공정하면 백성이 감히 태만하지 못하고 청렴하면 아전이 감히 속이지 못한다. 공정하면 밝아지고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라는 것이었다. 한자로 공생명(公生命), 염생위(廉生威)이다. 한마디로 "공직자가 공정하지 않고 청렴하지 않으면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킨다."는 의미다.

헌법 제7조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공무원 임용 때 선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다. 민선 7기에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로 탈바꿈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행복한 광주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혁신과 소통, 그리고 청렴과 공정이 라는 네 개의 바위가 정의롭고 풍요로운 도시 광주라는 자동차를 잘 이끌어줄 것이다. 거기에 광주가 개방적으로 외부의 잘된 사례들을 잘 수용한다면 목표에 도달하는 시점은 좀 더 앞당겨질 것이다.

無等鼓

외교 공관은 비즈니스 공간이자 한 나라의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가장 한국적인 분위기로 꾸며져 있다. 외관은 물론 실내 장식까지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해 공관을 찾는 현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국 대사관은 백자 모양의 외관 때문에 명물 취급을 받고 있다. 외관뿐만 아니라 공관에서 한국 문화 행사를 자주 열어 현지인들의 반응이 좋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국 대사관은 K팝 등 다양한 행사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 공관과 달리 국내에선 자치단체장들의 관사가 공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광주시 농성동에 있는 옛 전남지사 공관은 미술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전에는 지방 청와대로 불렸다. 1980년대 초반 지어진 후 대통령 지방 순시 때 숙소로 쓰이다 2008년부터 다목적 전시관으로 시민의 품에 들어왔다. 남악에 있는 현 전남지사 관사는 2006년 32억 원을 들여 전통 한옥으로 지었다. 속소를 포함한 공관(어진누리)과 비

즈니스 센터(수리제)로 구분됐었지만 비즈니스 활용도가 낮아도 연간 1억2000만 원의 관리비로 인해 논란이 잦다.

민선7기 들어 호화 관사 논란과 함께 무용론이 일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4년 전 윤창현 시장이 없애 관사를 부활시켰다가 반대 여론이 일자 한발 물러섰다. 첨단에 있는 자신의 집이 시청과 멀다는 이유로 매월동에 시비로 아파트를 얻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한옥 관사에 입주했다가 호화 논란이 부닥스러웠는지 10여 일 만에 예산 절감을 들어 공관 폐지를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대신 도청 예산으로 3~4억 원대 아파트를 관사로 임대하겠다고 해 굵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반면 이승우 강진 군수는 관사에 매년 600만 원의 월세가 들어간다고 자비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관사는 비즈니스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관사를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관사가 관선 시대 유품이고 특히 아파트 관사는 비즈니스 역할이 거 없다는 점에서 유지할 명분이 약하다.

/장필수 전남부부장 bungy@

기고



문병재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여의 시간이 흘렀다. 촛불 민심을 기반으로 한 문재인 정부가 광주는 그 어느 지역보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것이 광주의 정체성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지난 7월 1일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시정 목표로 한 민선 7기 이용섭호가 출범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졌음에도 오랜 차별과 소외를 받아 온 광주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광주는 20~30대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갔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복지 비용은 큰 폭으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대체부 220-0652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에ditorial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건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